

# 재정패널 소식지

2018년 제 2호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 재정패널 — 소식지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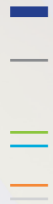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소식지

2018년 제 2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소식지

2018년 제 2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공식자료 이용안내	06
10차년도 가구원 의식조사 안내	07
2018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08
재정패널 활용 연구	32
재정패널 활용 기사 목록	3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18년 12월 10차년도 자료 공개 예정
- 2018년 현재 11차년도 조사 진행 중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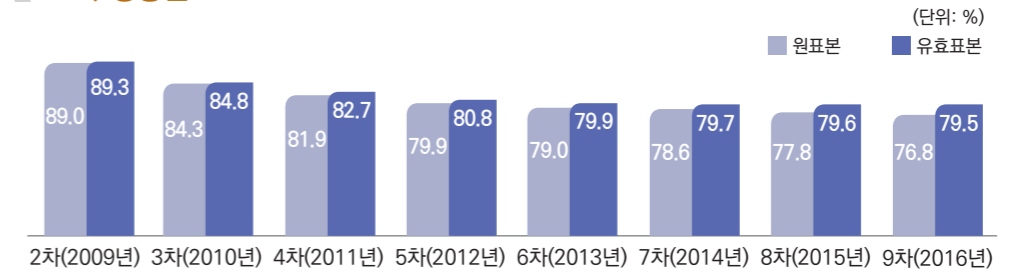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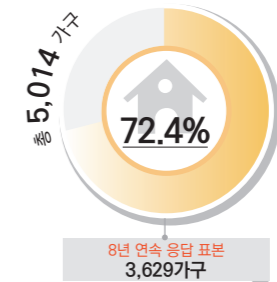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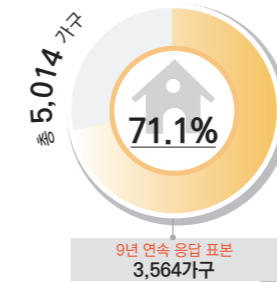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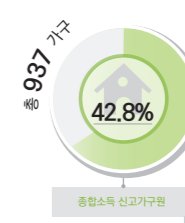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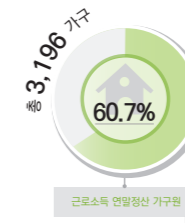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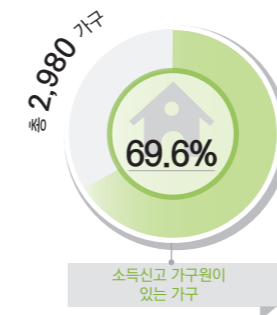
## 조사 성공률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사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10차년도 소득 증빙서류 수집율



## 재정패널 공식자료

- 1) 제공 범위 : 1-9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2) 제공 방식 :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3) 10차 자료 : 2018년 12월 재정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
-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9차년도까지 “납세자 의식조사”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10차년도부터는 “가구원 의식조사”로 변경되어 조세, 복지, 행정 등에 대한 각 가구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가구원 의식조사”의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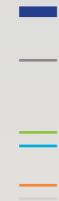
10차년도에는 조사문항을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몇 가지 항목들을 수정하였으며 급여 대비 소득세액 정도, 조세에 대한 이해도 및 의식, 위험회피 성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경 공개될 재정패널 10차년도 데이터 및 관련 자료 등에 안내될 예정이다.

〈표〉 10차년도 의식조사 문항

구분	조사내용
A	사회·정치에 대한 인식
	타인(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에 대한 신뢰
	정치적 성향 및 관심
B	투표 참여 여부
	조세·복지 제도
	세금 납부 정도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인식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금 납부 정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정도*
C	계층 간 소득격차
	복지 수준 및 축소/확대 부문
	세 부담 및 복지 수준
	납세 관련 태도
D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할인율에 따른 현금 결제 여부*
	납세 관련 인지도*
E	조세·세무 행정 평가
	조세 세무 관련 행정 평가*
F	위험회피
	상품 투자배분 상황 응답*
E	건강·은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기대수명
	은퇴 및 적정 노후 생활비

\* 10차년도에 수정·추가된 항목임

www.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18

#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지난 9월 14일 개최된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재정패널 홈페이지(panel.kipf.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박대근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소득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0차 재정패널조사 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그리고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동 제도가 없는 경우와 올해 9월부터 기준연금액의 인상 등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상황 아래에서 각각의 소득분배 상태와 빈곤상태를 비교하여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기준연금액 인상 등 제도변화 효과를 분석한다.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의 기초연금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초연금제도가 없었더라면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로 파악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소득역전방지 감액방식의 변경으로 그 효과가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작금의 악화된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고 이것의 정책우선순위가 높다면 제도 정비 목적의 소득역전방지 감액방식의 변경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2

### 중고령자의 가구형태 변화와 정책과제 - 소득 및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1~10차년도(2008~2017년)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가구형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형태 변화가 소득 및 주거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10여년간 중고령자의 가구형태는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 자녀동거가구의 감소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구형태의 변화는 절대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별로 가구소득과 소득구성원,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한 경우'는 경상소득을 증가시키고, 절대빈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부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한 경우'는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고, 절대빈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한 경우'는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자가거주 가능성과 주거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1인 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변화한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이동 지원이나, 확대가족 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I-3

### 넌프(Not-Out-Of-My-Pocket)현상 진단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김대한 동아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5차(2012년)~7차(2014년) 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넌프현상을 진단하고,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활용해 장기적인 넌프지수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98% 이상에서 넌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회에 넌프현상이 매우 만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학력인 경우, 저소득일수록, 자산이 작을수록, 무직인 경우, 근로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넌프현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20~40대 간에는 연령계층별 넌프현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50~64세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의향정도는 젊은층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은 낮아져 넌프현상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연령계층별 넌프지수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접목한 결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15년 2.34인 넌프지수는 2050년 3.6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인구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정부재정 및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넌프현상이 강한 고령계층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인구고령화가 정부재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중심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 차원의 복지확대 노력과 함께 자조노력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 II-1

### 주거 등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출산 간의 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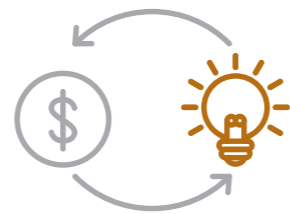
최근호 한밭대학교 조교수  
이정화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

올해 7월 정부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 방안은 돌봄서비스 확대, 출산휴가 제도 정비, 의료비 및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구성된다. 그와 함께 지난 해 발표한 로드맵의 연장선상인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확대가 내용의 골자이다. 현재 한국의 주거·경제 상황과 혼인 및 (저)출산 간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지와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주거지란 결혼과 자녀의 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가족형성 과정과 가족의 생활에 대하여 중요한 근간을 형성한다. 최근 개최된 제7회 인구의 날(18.7.12-13.)에서도 저출산대책 4대 추진 방향 중의 한 가지로 주거지의 안정성을 꼽은 점도 한국의 주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가구별 주택보급률은 55.47%로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며(통계청, 2016), 주택매매가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주택가격자수 2014.6. 93.1 → 2018.6. 100.78, 한국감정원, 2018).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시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상품'의 2~4월 대출 건수 및 대출금액은 작년 동일기간 대비 각 6배 및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서울 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신혼부부 거주율이 집중되는 등의 경향(이상림·이지혜, 2018)도 유사한 맥락인데, 이러한 가계 주거비의 상승은 생계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연기하는 등 출산율 하락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김민영·황진영, 2016). 해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출산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박진백·이재희, 2016). 가구의 주거 상황에 따른 주거비 수준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자녀 출산의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주거 면적, 지역, 주거 형태, 주거소유권 등 다양한 차원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출산과 주거 상황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 및 소득·소비,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다각화하고, 출산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조사의 5차~10차년도 패널데이터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은 많은 수의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개별 변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변수들 간의 연관 관계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갖기에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방법이다.



»II-2

가계의 소득, 자산 및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제1-9차년도 한국조세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소득, 자산 및 부채가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재정패널자료에서 가계의 소득은 집계되어 있으나,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자료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 집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계의 자산 항목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산항목은 가계의 예적금 등 저축, 펀드, 채권, 주식, 저축형·연금형 보험, 연금저축, 빌려준 돈, 여타 금융자산, 주택청약예금 및 저축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합한 변수를 가계의 금융 자산으로 칭하겠다. 가계의 비금융자산 항목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시장가격, 살고 있지는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시장가격, 보유하고 있는 비주택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의 시장가격,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기계 및 보유가축의 가치, 보유 선박의 가치, 보유한 귀금속의 가치, 여타 비금융 자산,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 이들을 합하여 가계의 비금융자산으로 칭하겠다. 가계의 부채 항목으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학자금대출, 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대출, 신용카드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그리고 기타대출금이 있다. 이들 항목을 모두 더하여 가계부채란 변수로 칭하겠다.

\* 편집자 주) 본문에 나오는 표는 재정패널 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

아래 표2\*의 연도별 가계의 평균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그리고 금융부채의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에 비금융자산의 증가율이 거의 6%에 가깝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 이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0.2% 및 0.1%로 그 증가세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비금융자산의 경우는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인 20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그 증가율이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표3\*에 있는 항목별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을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관련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채가 2016년 들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가계 평균 부채의 증가도 2011년과 2013년에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감소, 그리고 2015년 및 2016년에는 각각 0.1% 및 0.6%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조세재정패널에서는 금융기관대출 및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각각 2010년과 2012년 이후에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표4\*는 가계의 평균 소득과 소비 규모와 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2015년에 가계의 평균 소비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가계소득과 소비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자산 및 부채, 그리고 가계의 소득 등이 가계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3

## 소비지출불평등의 추이 분석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7~2016년 기간 동안의 우리 사회 경제 구성원들의 소비불평등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 수준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비지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과 달리 '기회의 평등' 관점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여 주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소비지출 요소 중 교육비 지출은 보편화된 공교육 서비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비대한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가구 간 소비지출 불평등을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가구 간 소비불평등의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교육비(공교육과 사교육) 지출의 영향과 교육비 지출 불평등을 가져오는 가구 특성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소비불평등 수준은 연도별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체 소비불평등에 대한 지출항목들의 기여도 역시 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 수준은 분석 기간 동안 다소 감소하고 있었으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다소 상향 수렴하는 양태를 보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확인하기 위한 회귀기반 불평등분해 결과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요인은 가구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1

###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각각 일반화된 베타함수를 추정한 다음 그로부터 빈곤 및 불평등 지표를 도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동수당제도 초기 발달단계의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FGT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척도에서 빈곤이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엄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자원조달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논의 단계에서 수급자의 선정 기준 기준별로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2

### 가구의료부담대비 건강보험급여 추정

이창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의료비지출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큰 재무적 부담때문에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의료비지출을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의료비지출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고 이는 개인의 생명,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재정적 부담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없애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는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질병발생의 위험군 특히 저소득층의 질병발생위험군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는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근거로 부과하고 보험급여비의 배분은 질병발생을 근거로 행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질병발생위험군으로 소득이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에게로, 건강한 사람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직장가입자에게서 지역가입자에게로 분배되는 3중보조의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도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지출측면의 소득보조는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과 지출구조보다는 가구의 의료비부담과 의료비혜택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이 가구의 의료비부담의 대비책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의 의료비부담은 가구의 건강보험료와 가구의 의료비지출의 합으로 정의하고 가구의 의료비혜택은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으로 정의하여 가구의 의료비부담대비 의료비혜택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부담, 가구소득대비 의료비혜택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개인소득이 개인별로 조사가 되어 있어 가구별 건강보험료와 가구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별로 건강보험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지출도 가구별로 조사가 되어 있어 소득분위별로 가구의 의료비지출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액은 조사가 불가능해 재정패널자료만으로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재정패널자료에서 건강보험 급여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하는 2016년 건강보험료대비 급여비 현황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가입형태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재정패널자료에서 가입형태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액을 산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재정패널자료에서 가구별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액,

가구의 의료비부담 대비 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분위별, 가입형태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가구소득 대비 급여액, 가구소득대비 의료비부담등을 소득분위별, 가입형태별로 파악하였다. 가구소득, 가구의 의료비부담, 건강보험료, 등은 가구재정패널자료의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이용하여 매년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7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III-3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행태 변화 분석

조남운 서울대학교 강사  
강영준 제주관광공사 과장

2015년 1월 1일에 실시된 대규모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 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상 시점 전후 2개년씩 총 4개년도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표본선택모형으로 흡연량과 흡연확률을 분석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흡연량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했으며, 흡연 확률의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의 흡연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패널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한 소득분위별 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가장 높은 1분위도 -0.26으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소득탄력성은 대부분의 분위에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유의한 분위에서는 0.4-0.5 사이의 비탄력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BA(Before-After)모형을 통해 분석한 흡연 감소량은 2, 6분위가 가장 높은 M자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흡연량 수준에서는 1.2분위가 나머지 분위에 비해 낮게 나왔다. 이는 1분위는 가격인상 시점 전부터 소비량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2분위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소비량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QUAIDS를 통해 분석한 흡연 지출이 다른 부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의 담배 가격이 다른 부문 지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님을 의미한다.

»IV-1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홍우형 한성대학교 조교수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Arellano and bond(1991)의 모형을 적용한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부금 탄력성은 1.2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 기부금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조세유인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조세유인이 감소한 고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순기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험이 순기부액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 IV-2

이중 수요모형을 이용한 기부금의 조세효과 추정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조교수

기존 연구들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대해서 엇갈린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보다 정치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부금의 조세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Cragg (1971)이 제안한 이중수요함수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부에 대한 참여는 소득이나 세금혜택보다는 개인의 이타적 성향여부에 달려 있는 반면, 기부 규모는 소득이나 세금혜택에 의해 결정되는 기부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수요함수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기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기부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부의 가격이 가지는 소득과의 내생성 문제를 기부금 공제방식이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의 가격탄력성은 1.3908로 계산되었고 이와 같이 1보다 큰 탄력성은 기부활동이 기부가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했던 탄력성 값보다는 훨씬 적은 값이다. 본 연구는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간 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 점과 세법규정의 변동을 활용하여 소득과의 내생성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성이 있다.

» IV-3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개인기부 규모 추정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현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 V-1

## 각종 양극화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양극화 추세 분석 (2007-2017)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되다가 최근 들어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득분배상태와 유사하게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즈음하여 양극화가 각 분야에 나타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2000년대 중반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그 이후 연도에 대한 소득양극화지수 추정연구가 통계청의 소득 5분위배출 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현실을 극복하고자 2007년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매년 조사되어 2017년 적용 소득까지 조사된 1-10차 재정패널자료로써 우리나라의 양극화 추세를 다양한 양극화지수로써 보이고 그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소득5분위배출은 규칙성은 찾을 수 없지만, 상위 20%소득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계층의 4배를 넘긴 뒤, 5-6배에 이르는 기간이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를 조사한 2006년 이후의 소득5분위배출을 보면, 시장 소득기준으로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런 것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이든 전국가구이든 시장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소득5분위배출이 작아져서 조세 및 이전소득으로 인한 재분배효과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양극화지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양극화의 경우 등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으며, 상대적 양극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V-2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이 개인 사업자의 자동차 보유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으로 인해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액의 제한에 따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대의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했을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의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거나 엄격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에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동(同)제한규정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 변경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차량보유 행태가 과거와 비교해서 변동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계효과의 분석 및 기간별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가구의 기본적인 절세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는 반면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절세효과의 감소로 인해 개인사업자 가구의 차량 취득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에도 전체적인 절세효과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익적 영향은 2016년의 경우에는 동(同)규제가 전체 개인사업자 대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외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함께 전체 필요경비의 영구적 부인 대신 연간 800만원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귀속시기를 장래로 이연하는 제한적인 과세상 불이익의 성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조세적 유인이 세금부담에 비해 훨씬 중요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법상 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수입금액이 낮은 연도에 차량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거래의 장부상 손실을 세법상 규제와 무관하게 그 다음 연도까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조세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비유의적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시행 결과는 2017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가능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들의 자동차 보유·운행 및 전반적인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V-3

###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신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된 관심은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관련된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납세의식을 임대소득 신고, 세부담에 대한 인식, 증세기 세부담 의향, 세금신고에 대한 인식, 조세·세무 행정 평가,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관심변수는 주거현황 및 보유세 관련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대소득 신고 관련 분석에서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응답자일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납세의식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둘째,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다는 것만으로 납세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높을수록 여러 납세의식에 있어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세부담에 비해 정부혜택도 많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성실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 서비스 혜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주거환경만족도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납세자의식과 여러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면적도 면적이 넓은 곳에 주거할수록 대체로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재산세 납부여부나 부동산소득 유무가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산세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이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택 보유형태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사항과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납세의식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V-4

## The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on Social Trust: Evidence from South Korea

강성훈 한양대학교 조교수

Mark Skidmore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disasters affect social trust levels using South Korean panel data from 2014–2016. We also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s of disasters on social trus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ster. We consider four types of disasters: typhoons, heavy rain, heavy snow and strong winds and waves. Our findings show that although all of these disasters influence the level of generalized social trust, each type has separate impacts. In our finding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umulative damage costs per capita and social trust levels for heavy rain, heavy snow and strong winds and waves but we find the opposite result for typhoons. In the disaster recovery process, it is possible for social trust to be strengthened and weakened at the same time. Social trust can develop when victims such as neighbors and firefighters interact with others. Conversely, when a local government responds slowly to a disaster, dissatisfaction and discontent toward it can increase and this could weaken social trust. Moreover, disaster-affected individuals may be more competitive over limited resources, resulting in conflicts among them. Thus, we argue that the net effects of disasters on social trust levels can differ based on the speed of government responses to disasters and on active support for the victims from people such as neighbors.

##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현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학과
여성 경제활동 결정요인 및 관련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영은	학위논문(박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 조세정책전공
주택경제학 및 공공투자평가에 관한 세 가지 실증 연구	채수복	학위논문(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도시경제학
한국 가구의 나눔 행동에 관한 연구 : 자선적 기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에 관한 seemingly unrelated multivariate tobit을 활용한 분석	최민지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영준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대학원 금융보험학과

\*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 목록입니다.



## 학술논문

제목	저자	비고
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오창수 박영준	보험학회지, 112(0): 99-123
조세 공정성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현재소비와 미래 소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분석: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신나리 이영한 박기백	회계학연구, 42(6): 159-194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강민조	세무학연구, 34(3): 309-331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강성훈	주택연구, 25(4): 5-19
사회보장 급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론적 연구	추병주 김성훈 정상기 김경준 이인수 김현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256-264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경배	재정학연구, 11(1): 77-107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및 사적연금별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보험학회지, 115(0): 63-83



## 재정패널 활용 기사 목록

재정패널  
소식지

기사제목	신문명	일자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탈출률 '6.8%'	KBS	2018-03-12
빈곤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소득이동성 하락	한겨레	2018-03-30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생산성 1.5% 높아져"	연합뉴스	2018-06-08
"소득재분배, 조세보다 재정이 5배 더 효과"	한겨레	2018-07-04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한국은 여전히 최하위권	연합뉴스	2018-08-05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 자산 양극화도 심화... 서울 집값 급등 여파	조선비즈	2018-08-27
소득 대비 주택 보유세 부담 '저소득층 > 고소득층'	경향신문	2018-09-05
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이면 사용액 10% 줄어든다	서울경제	2018-10-24

\* 최근 7개월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재정패널 관련 기사들의 목록입니다.



##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18. 11. 3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 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mailto:panel@kipf.re.kr), 044-414-2225/2473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